

##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박 정 수\*\*

### 논문 초록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를 국민계정자료와 사업체 및 기업체 미시자료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임금상승률이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보다 낮았다는 기존 국내외 문헌의 주장들은 실질화 방식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해석상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교정한 결과 2000-2017년 기간 중 취업자당 GDP 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은 명목기준이나 동일한 물가지수를 사용한 실질기준 모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업체 및 기업체 원시자료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증가율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유의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생산성증가율에 비해 임금증가율이 낮았던 것으로 잘못 인식된 사실에 근거하여 취해진 기존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 주제어: 노동생산성, 임금, 물가지수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E24, E25

투고 일자: 2019. 3. 22. 심사 및 수정 일자: 2019. 4. 16. 게재 확정 일자: 2019. 4. 26.

\* 본 논문은 서강대학교 RIME Working Paper, 박정수(2019), 『한국의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 소득분배율, 그리고 가계소득』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했음을 밝힌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jspark@sogang.ac.kr

## I. 서 론

금융위기 이후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은 지속되는데 반하여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국내외 문헌들과 언론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sup>1)</sup> 특히 박종규(2013, 2014), 장하성(2015), 김유선(2015) 등의 문헌에서는 2007년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임금이 함께 증가한 반면 2007년 이후 기간에는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지만 임금은 정체되고 있다는 주장을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GDP 통계자료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해당 문헌들은 이를 근거로 경제성장과 임금 간 괴리가 발생한 이유가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중 임금에 배분되는 부분이 작아지는 데 있다고 추론하고 이를 다시 노동소득 비중 감소 또는 가계소득 비중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최근 정부정책이 임금 및 가계소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임금인상에 역점을 두는 것도 이러한 통계적 근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이와 같은 거시 총량지표 간 비교결과와는 달리 제조 사업체 원시자료에 기반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에 괴리가 거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본 연구는 이러한 거시자료와 미시자료 간 대비되는 결과에 주목하여 국민계정의 거시자료, 한국경제의 사업체 및 기업체 미시원시자료 등 한국경제를 묘사하는 모든 이용 가능한 포괄적 범위의 통계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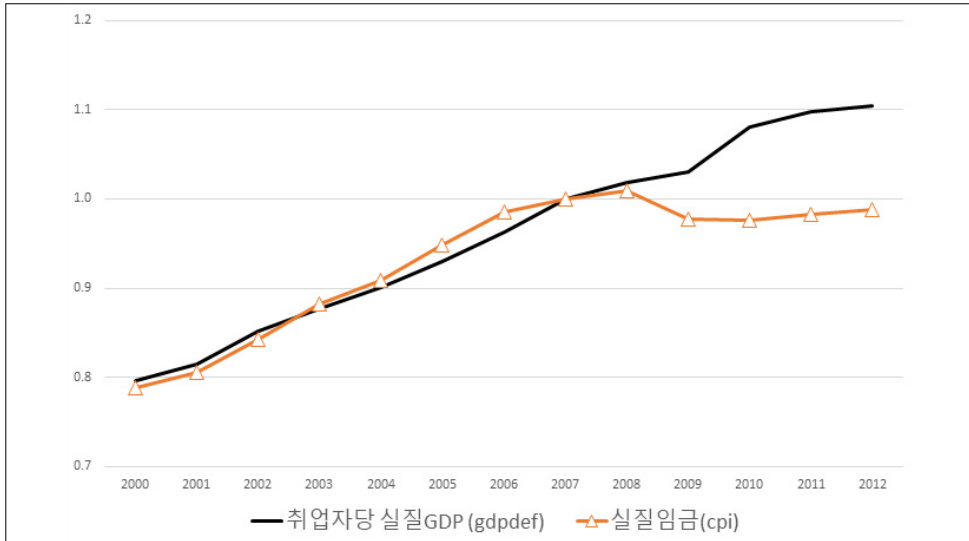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괴리를 처음 지적한 대표적인 문헌은 박종규(2013)의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성장은 지속되는데 고용증가가 낮다는 의미에서 ‘고용 없는 성장’에 더하여 성장의 과실이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임금 없는 성장’을 주장하여 학계와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실증적 근거로서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성장률과 취업자 1인당 실질GDP성장률을 비교하였다. <그림 1>은 해당 보고서의 그림을 복원하여 제시한 것으로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GDP 각각을 2007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이전에는 두 변수가 유사한 속도로 증가했지만 2007년 이후기간에

1) 박종규(2013, 2014), 홍장표(2015), 장하성(2015), 김유선(2015), Dabla-Norris, Kochhar, Suphaphiphat, Ricka, and Tsounta(2015), ILO(2018) 및 2014년 다수의 언론기사 등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찾아볼 수 있다.

2) 한국생산성본부(2013)의 p. 66에 제시된 노동생산성과 1인당 임금의 연별 자료를 참고하였다.

는 임금증가율과 취업자 1인당 GDP증가율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3)</sup>

〈그림1〉 취업자당 실질GDP와 실질임금의 추이(2007=1)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로 저자 계산.

주: 1)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액과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GDP를 각각 CPI와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였음.

2) GDP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로 나눔.

노동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서 몇몇 문헌에서는 국민계정에서 자영업 영업잉여를 제외한 국민소득 중에서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1990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지적한다.<sup>4)</sup> 더 나아가 노동소득 증가율 둔화가 곧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로 이어진다고 추론하고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원인이 기업소득 비중 증가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sup>5)</sup>

한편 제조사업체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수록한 한국생산성본부(2013)의 노동생산성

3) 박종규(2013)의 p.32 〈그림 20〉을 최대한 유사한 출처를 이용하여 복원한 것이며 장하성(2015), 김유선(2015), Dabla-Norris et al. (2015)에서도 유사한 그림을 찾아볼 수 있다.

4) 주장영·전수민(2014)와 이병희(2015)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5) 홍장표(2015)와 장하성(2015) 등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및 1인당 임금자료를 보면 2000-2012년 기간 동안 제조 사업체의 명목노동생산성은 연평균 6.04% 증가했고 종사자당 명목임금은 연평균 6.02%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즉,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차이는 거의 없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문헌들의 연구결과와 대비된다.

거시 및 미시자료의 분석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업체, 기업체 및 국민계정 자료를 기초로 200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취업자당 실질GDP와 실질임금 비교 시 실질화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련된 해석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새로운 비교분석을 제시한다. 둘째, 법인기업 전수조사자료인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중 인건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의 10인 이상 전수조사 사업체 원시자료인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한다. 본 연구가 확인한 실증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GDP 비교 시 실질화방식의 문제점을 제거하면 두 변수의 증가율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sup>6)</sup> 둘째, 2000년 이후 제조업 사업체 및 전 산업 기업체 자료 분석에서는 오히려 명목임금증가율이 명목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와 대비되며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증가율 보다 낮지 않고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다는 실증적 근거를 미시 및 거시자료를 기초로 제시한다. 또한 국민경제 차원에서 실질임금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기업 부문이 자본생산성보다 더 큰 이익을 취해서가 아니라 취업자당 GDP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약 기존문헌에 따라 잘못 인식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책이 있다면 재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분석에 이용한 주요 자료를 소개하고 제Ⅲ장에서는 미시 및 거시 자료를 기반으로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계산하여 비교 제시한다.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6) Bosworth, Perry, and Shapiro (1994)는 1979-1993년 기간 중 미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실질 임금 간 괴리를 논하면서 동일한 지적을 한 바 있다.

## II. 자 료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 및 노동생산성에 관한 산업별 자료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이용하였다. 고용 및 임금과 관련된 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의 포괄성과 대표성이 높은 표본조사들이어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고용 및 임금 등의 주요 변수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기초자료들로 볼 수 있다. 각 기초자료에 대한 특징과 주요변수들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기초자료의 특성

범주	통계명	출처	주요 변수	조사대상 범위
부가가치 및 생산성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부가가치, 인건비, 종사자수 등	- 제조업 - 10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 - 법인, 개인 포함
	국민계정	한국은행	부가가치, 소득지표등	국민경제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산업별 기업 재무제표	- 전산업 - 국제청신고 기업 자료 - 2008년 이전: 표본조사, 법인 - 2009년 이후: 전수조사, 법인 (+ 큰 규모 개인사업체)
고용 및 임금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종사자지위별 고용 등	- 전산업 - 전국 3.5만 가구 표본조사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임금	- 전산업 - 1인 이상 3.2만사업체, 근로자 80만명 임금근로자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임금	- 전산업 -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종사자 1인 이상 2.8만개 표본사업체 임금근로자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주요변수들을 도출할 때에는 가능한 한 동일한 기초자료 안에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려고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다른 기초자료의 변수를 사

용하였다. 일부 연구들에서 조사범위가 다르고 특성이 다른 기초자료들에서 필요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주요 변수를 도출하거나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측정 상 오류가 발생하여 왜곡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표 비교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 Ⅲ. 노동생산성과 임금에 대한 비교분석

#### 1.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다. 경쟁적 노동시장을 가정할 때 노동시장의 균형은 식 (1) 과 같이 실질임금( $w$ )이 노동의 한계생산( $MPL$ )과 일치할 때 달성된다. 여기서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가 아니라 생산물물가로 나누어 계산됨에 유의해야 한다.  $Y$ 를 실질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산출 그리고  $L$ 을 노동이라고 하자. 이때 노동의 평균생산( $Y/L$ )을 노동생산성으로 정의하고 식 (1)의 양변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누면 식 (2)와 같이 좌변은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이 되고 우변은 노동의 산출탄력성( $\varepsilon = MPL * L / Y$ )으로 표현된다. 이때 좌변은 노동소득분배율( $= wL / Y$ )로 해석할 수도 있다.

$$w = MPL \quad (1)$$

$$w / (Y / L) = \varepsilon \quad (2)$$

이처럼 노동시장의 균형조건에 의하면 생산기술을 반영하는 노동의 산출탄력성에 따라서 노동생산성 대비 실질임금 비율 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정해진다.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변하지 않으면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같은 비율로 변화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은 일정할 것이다. 이 때 단기적으로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단기적인 충격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두 변수의 증가율에 괴리가 발생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하는 경우는 생산의 기술적 또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변화했을 가능성과 균형조건에서 벗어나 비효율성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상존한다.<sup>7)</sup> 따라서 장기적으로 두 변수의 증가율이 다르게 움직인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생산기술의 변화 또는 산업

7) 남성일(1991)에서는 임금증가율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할 때 장기적으로 노동의 산출탄력성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분포의 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경제의 비효율성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한다.<sup>8)</sup>

노동시장이 경쟁적이지 않거나 다른 제약이 원인이 되어 식 (2)의 좌변과 우변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괴리의 정도가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균형조건에서 볼 수 있는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무수한 제약과 비경쟁적 조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와 보고서들에서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해 온 것은 이러한 분석과 이해에 근거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 2. 경제성장과 임금: 국민계정 자료분석

‘임금없는 성장’을 주장한 기존 문헌들은 경제전체 평균 실질임금과 취업자당 실질 GDP를 단순히 비교하여 추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성과 포괄범위가 매우 다른 두 지표를 직접 비교하고 직관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왜곡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지표는 다른 범위에 대한 평균지표이므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임금통계는 임금근로자의 평균적인 근로소득만을 측정하는 반면 경제전체의 GDP는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모두 포함하므로 비임금근로자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어 범위가 상당히 다르다.<sup>9)</sup> 한국경제는 자영업 부문에 종사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018년 기준 25.4%에 달하는 등 상당히 큰 편이고 시계열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위가 다른 두 지표의 시계열을 단순비교하여 직관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둘째, 국민계정상의 GDP는 법인기업, 자영업, 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포함하고 있고 각 부문별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가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부문별 비중이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변화하고 있다. 총량지표 간 비교는 이러한 부문 간 차이와 비중 변화를 볼 수 없으므로 잘못된 해석을 도출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 임금지표로 일반

8) Park (2007)에서는 CES생산함수의 경우 평균노동생산성 증가율과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 간에 괴리가 생기고 노동의 산출탄력성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1963-2000년 한국경제 자료를 기초로 CES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한계생산성과 임금간 괴리가 유의하지 않음을 보인바 있다.

9) 대표적인 임금조사 자료인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모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으로 월임금총액이 사용되는데 이는 인건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생산성과 비교를 위해서는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인건비가 더 적절하다.

임금과 노동생산성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포괄범위가 다른 두 개의 총량지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다음 절의 분석에서와 같이 동일한 통계자료 내에 노동생산성과 인건비 변수가 동시에 제공되는 사업체단위 또는 기업체단위 원시자료를 기초로 비교해야 신뢰성이 높고 보다 명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내외문헌에서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총량적 지표 간 관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질임금과 실질GDP 간 비교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연구들에서 비교방법과 해석상에 심각한 오류가 있고 그로 인해 중요한 왜곡이 초래되었다는 점이다.<sup>10)</sup> 그리고 비교방법상의 오류를 교정하면 기존 주장들과는 상당히 다른 결론에 이른다는 점이다. 다음 세부 절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였다.

#### (1) 취업자당 GDP와 임금: 한국

한국경제의 경제성장과 임금증가율을 비교한 연구들 중에서 두 변수간의 심각한 괴리를 처음 지적한 문헌은 박종규(2013, 2014)의 연구보고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그림 1>에서 보았듯이 2007년 이후 실질임금증가율이 취업자당 실질GDP성장률보다 낮아 ‘임금 없는 성장’이 확인되었음을 주장하였다.<sup>11)</sup> 여기서 실질임금과 실질GDP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두 변수 간 추이의 차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성장은 지속되는데 그 중 임금에 배분되는 부분이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추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실질임금증가율과 실질GDP증가율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소득이 임금에 배분되는 비중이 적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임금비중의 변화는 없지만 두 변수를 실질화할 때 두 개의 다른 물가지수를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질임금을 도출할 때는 구매력기준에서 평가하므로 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실질화하고 실질GDP를 도출할 때는 생산물단위 관점에서 평가하므로 명목GDP를 산출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 물가지수

10) Dabla-Norris et al. (2015) p. 14, ILO(2018) p. 4, 김유선(2015) p. 27, 장하성(2015), 박종규(2013, 2014) p. 32 등 국내외 문헌 대부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화를 하였고 그로 인해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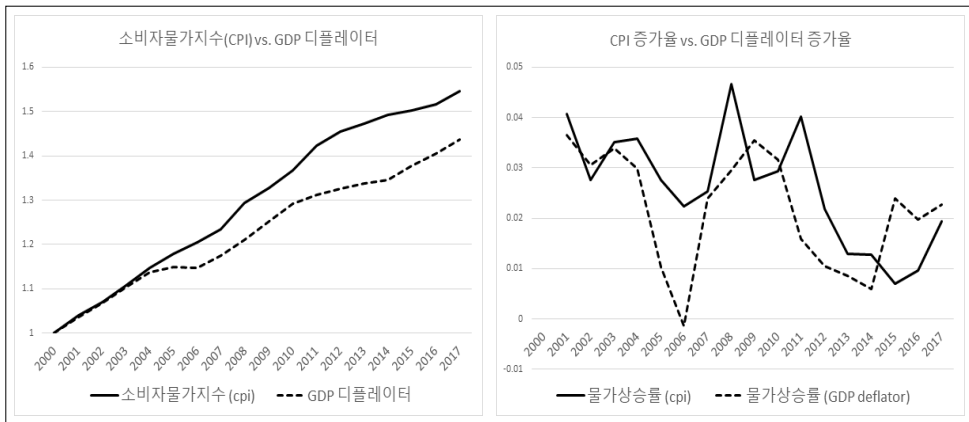
11) 연구보고서에는 ‘취업자당 실질GDP성장률’을 ‘실질노동생산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로 실질화한다. 그러므로 실질임금과 실질GDP의 변화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다른 기준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점을 감안하여 해석해야 한다. 더군다나 두 물가지수의 변화추이가 크게 다르다면 기존문헌의 추론이 틀릴 가능성이 커진다.

〈그림 2〉는 소비자물가지수와 GDP디플레이터의 기준을 2000년으로 하고 두 지수의 추이와 각각의 물가상승률을 보여 주고 있다. 2000-2017년 기간 동안 두 물가지수의 변화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누적 54.6% 증가한 반면 GDP디플레이터 증가율은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볼 때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에 비해 GDP디플레이터 물가상승률이 유의하게 낮고 두 물가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이며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문헌의 방식대로 취업자당 명목GDP를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고 임금을 CPI로 실질화하면 매년 발생하는 국민소득 전부를 모두 임금으로 배분한다고 해도 실질임금이 취업자당 실질GDP에 비해 10.9%p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경제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임금으로 배분한다고 해도 실질화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마치 적게 배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림 2〉 물가지수(2000년=1)와 물가상승률: CPI와 GDP디플레이터 기준



출처: 한국은행 ECOS, 저자계산.

비교분석의 목적이 국민들이 생산하여 창출한 소득과 그 중에서 임금으로 배분되는 부분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GDP를 국민생산이 아니라 국민소득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이 비교를 통해 ‘임금 없는 성장’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국민이

12) 두 물가상승률 지표 간 상관계수는 이 기간 동안 0.489에 불과하다.

기여한 국가경제의 소득은 증가했지만 임금은 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변수를 소득개념으로 보고 그 추이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명목기준으로 명목임금과 취업자 1인당 명목GDP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두 변수 모두 동일한 물가지수 기준으로 실질화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4년 미국에서도 1979-1993년 기간에 대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현상이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당시 브루킹스연구소의 Bosworth, Perry, and Shapiro (1994)가 본 연구와 동일한 지적을 하며 괴리현상이 착시이며 동일한 산출물가지수로 실질화해서 비교하면 괴리가 사라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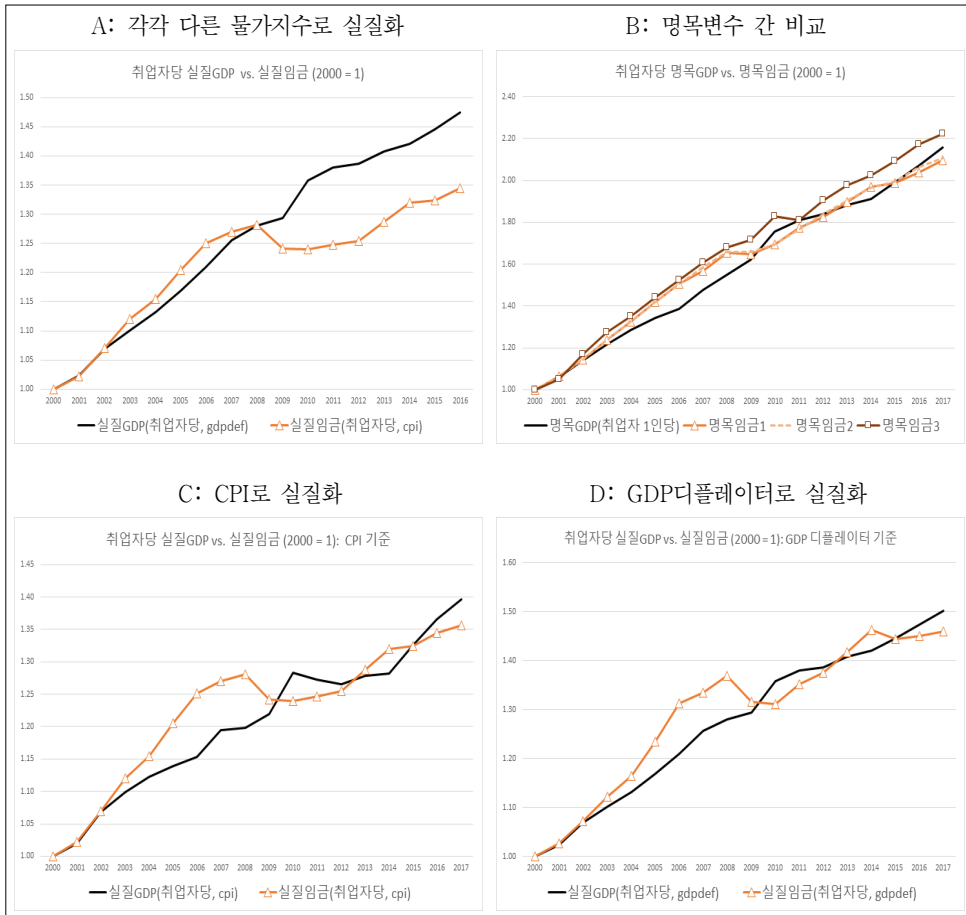
기존 문헌의 실질화방식이 해석상 심각한 오류를 초래하는 것은 다음 그림들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의 A는 2000-2017년 기간에 대해서 기존 연구 방법론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은 CPI로 그리고 취업자당 GDP는 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하고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본 <그림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sup>13)</sup> 동 기간 실질임금의 누적증가율은 35.6% (연평균 1.8%) 인 반면 취업자당 실질GDP의 누적증가율은 50.2% (연평균 2.4%) 다. 이처럼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임금증가율 간 큰 괴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그림 3>의 B에서는 명목임금과 취업자당 명목GDP를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비교하였다. 평균 명목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명목임금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명목임금2), 사업체노동력조사(명목임금3)의 월임금총액 등 세 가지 자료에 근거하여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0-2017년 기간 동안 이들 임금지표와 취업자당 명목GDP성장률 간 추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기존 문헌의 결과와 대비된다.<sup>14)</sup> 동 기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기준 명목임금의 누적증가율은 109.7% (연평균 4.5%) 이고 취업자당 명목GDP의 누적증가율은 115.8% (연평균 4.6%) 다. 기존 문헌의 결과와는 달리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임금증가율 간의 유의미한 괴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증가율이 매우 유사하다는

13) 기존 연구에서는 2007년 전후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2007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지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2000년 이후 기간전체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2000년을 기준연도로 삼았다. 2000-2017년 기간에 대해서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두 방식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해를 기준연도를 삼느냐는 시각적인 차이만 있지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14) 2000년-2017년 기간 동안 일관성 있는 임금시계열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그리고 사업체노동력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액이 제공되고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시계열의 경우 2006년까지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 이후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1인 이상 전체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이용하였다.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C에서는 취업자당 GDP와 임금 모두를 동일하게 CPI기준으로 실질화하였고 D에서는 모두를 동일하게 GDP디플레이터기준으로 실질화하여 실질화기준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을 제거했다. 그 결과 역시 두 변수의 증가율 간에 유의미한 괴리는 볼 수 없다.

〈그림 3〉 취업자당 GDP와 임금: 실질지수와 명목지수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1) 취업자당 GDP는 국민계정의 GDP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로 나눔.

2) 실질임금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사용하였음.

3) cpi는 소비자물가지수로, gdpdef는 GDP디플레이터로 각각 실질화한 것임.

4) 명목임금1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명목임금3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명목임금2는 2006년까지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그 이후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1인 이상 전체 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을 이용함.

기간별 증가율 비교를 살펴보아도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 2>는 임금과 취업자당 GDP의 5년 단위 기간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2-2007년 기간 동안 실질임금은 누적으로 18.6%, 취업자당 실질GDP은 누적으로 17.4% 증가하였고 2007-2012년 기간에는 실질임금은 누적으로 -1.2%, 취업자당 실질GDP은 누적으로 10.4% 증가했다.<sup>15)</sup> 즉, 기존 문헌의 주장과 같이 2007년 이전과는 달리 2007-2012년 기간에 두 변수 간에 큰 괴리가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명목기준 비교는 다르다. 2002-2007 기간에는 명목임금의 누적증가율이 37.1%이고 취업자당 명목GDP의 누적증가율은 29.2%이어서 이 기간 중 임금증가율은 성장률을 초과하였다. 2007-2012년 기간에는 반대로 명목임금의 누적증가율이 16.3%이었고 취업자당 명목GDP의 누적증가율은 24.7%이어서 임금증가율이 성장률에 못 미쳤다. 두 기간을 합한 2002-2012년 기간을 보면 명목임금은 누적으로 82.4% 그리고 취업자당 GDP증가율은 누적으로 84.0% 증가하여 명목임금과 취업자당 명목GDP는 매우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2〉 임금상승률 vs 취업자당 GDP증가율

지표	기간별 누적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2002-2007	2007-2012	2012-2017	2002-2012	2000-2017	2000-2017
실질임금상승률	18.6%	-1.2%	8.2%	25.5%	35.6%	1.8%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	17.4%	10.4%	8.3%	38.7%	50.2%	2.4%
명목임금상승률	37.1%	16.3%	15.4%	82.4%	109.7%	4.5%
취업자당 명목GDP증가율	29.2%	24.7%	17.6%	84.0%	115.8%	4.6%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계산.

주: 1) 임금은 일관된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임금총액을 사용하였음.

2) 실질임금상승률은 CPI를 기준으로, 취업자당 실질GDP 증가율은 GDP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각각 실질화하였음.

최근 국내외 자료를 통해서 실질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다는 통계들을 제시한 연구들 모두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Dabla-Norris et al. (2015), ILO (2018), 김유선 (2015), 장하성 (2015), 박종규 (2013, 2014) 등 관련 국내외 연

15) 본 연구가 박종규 (2014)의 수치와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연구가 분기별 자료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연도별 수치를 사용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보고서 및 저서에서 모두 노동생산성을 GDP디플레이터를 기초로 그리고 임금을 CPI를 기초로 각각 다르게 실질화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문헌 모두 두 지표를 비교할 때 잘못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sup>16)</sup> 결론적으로 기존 국내외 문헌들은 비교목적상 적절하지 않은 실질변수 비교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과 임금 증가율 간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괴리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 (2) 취업자당 GDP와 임금: 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도 1994년경에 1960년 이후 기간 미국의 비농업부문의 실질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추이를 살펴본 바 1979-1993년 기간에 대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간 괴리현상을 발견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표 3>을 보면 CPI로 실질화한 시간당 실질임금(CPI: A)와 비농GDP디플레이터(NFGDP)로 실질화한 실질 노동생산성(NFGDP: B)는 1960-1973년 기간 동안 유사한 증가율을 보였지만 그 이후 1973-1993년 기간동안 실질임금증가율이 실질노동생산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두 변수 간의 괴리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당시 브루킹스연구소의 Bosworth, Perry, and Shapiro(1994)는 본 연구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 괴리현상을 설명하였다. 즉, 관찰된 괴리현상 중 상당부분이 실질화과정에서 두 변수에 각각 다른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발생하는 착시현상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표 3>과 같이 생산성과 임금 모두 동일한 산출물가지수(비농GDP디플레이터, NFGDP)로 실질화해서 비교한 실질노동생산성(B)와 시간당 실질임금(C)의 경우 괴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보였다.

<표 3> 실질임금과 실질노동생산성 간 증가율 비교(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1960-73	1973-93	1973-83	1983-93
시간당 실질임금(CPI)	A	2.4%	0.4%	0.2%	0.5%
실질노동생산성(NFGDP)	B	2.5%	0.9%	0.6%	1.2%
시간당 실질임금(NFGDP)	C	2.5%	0.8%	0.5%	1.0%

출처: Bosworth, Perry, and Shapiro(1994) 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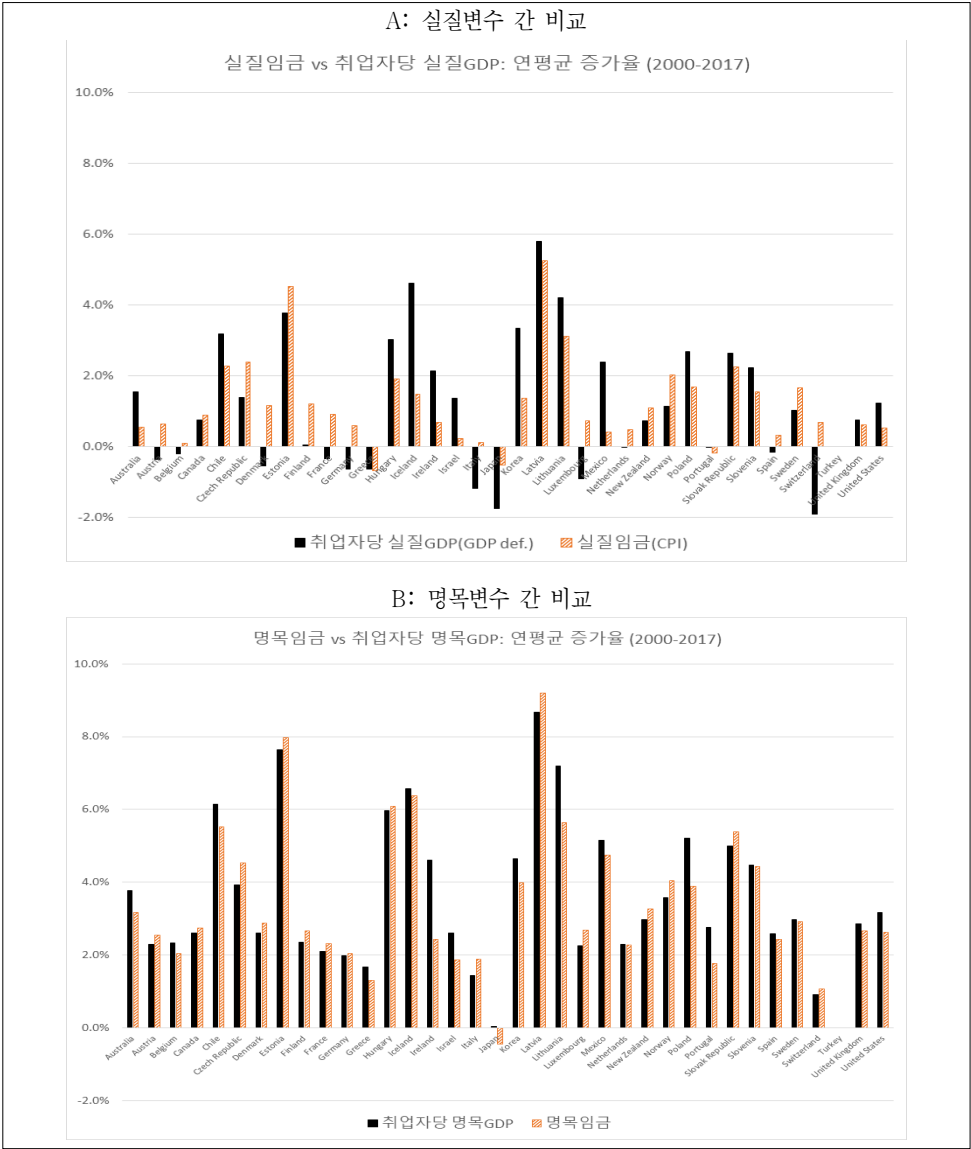
주: CPI는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한 것이고 NFGDP는 산출물가지수(비농업GDP디플레이터)로 실질화한 것임.

16) Dabla-Norris et al. (2015) p. 14, ILO(2018) p. 4, 김유선(2015) p. 27, 장하성(2015), 박종규(2013, 2014) p. 32 등 국내외 문헌 대부분에서 두 변수의 실질화를 각각 GDP디플레이터와 CPI로 하였고 그로 인해 해석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취업자당 GDP와 임금: OECD국가 간 비교

경제성장과 임금 비교시 실질화방식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아 잘못된 해석을 제시한 것은 국제기구 연구보고서에서도 발견된다. ILO (2018) 보고서에서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2010-2016 기간 실질임금증가율과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을 비교하고 그

〈그림 4〉 취업자당 GDP성장을 vs. 임금상승률: OECD 국가간 비교, 연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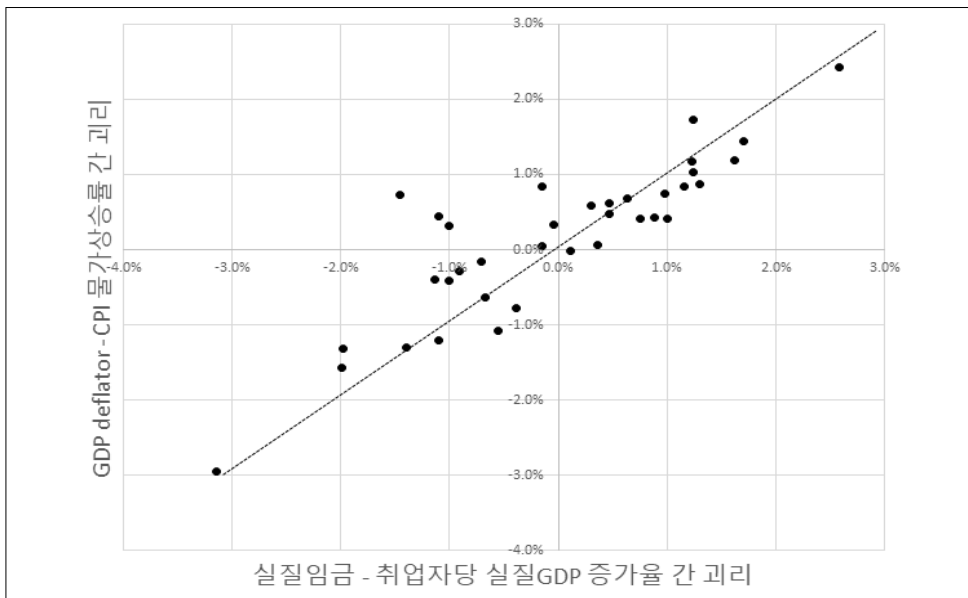


자료: OECD, Stat, ILO DB, 저자계산.

중 한국의 경우 실질임금증가율이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어 경제의 성과가 노동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Dabla-Norris et al. (2015)의 IMF Staff Note에서는 2005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독일, 일본, 미국, 스페인, 영국 등 12개 주요국들의 실질임금지수와 취업자당 실질GDP지수 간 유의미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기초로 노동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분석들을 살펴보면 역시 앞 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GDP는 GDP디플레이터로, 그리고 임금은 CPI로 각각 실질화하였고 역시 비교시 해석의 오류를 범하였다.

OECD 국가간 비교에서도 실질변수간 비교가 아니라 명목변수간 비교를 하는 경우 증가율 간 괴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의 A에서는 2000-2017년 기간 35개 OECD 국가들에 대해서 연평균 실질임금상승률과 취업자당 연평균 실질GDP성장률을 비교하였다. 이 경우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OECD국가에서도 두 변수 간 상당한 괴리가 나타난다. 하지만 명목기준으로 비교한 B의 경우에는 A와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임금상승률과 취업자당 GDP성장률 간 차이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실질임금-취업자당 실질GDP 증가율 간 괴리 vs. GDP디플레이터-CPI 물가상승률 간 괴리: OECD국가, 2000-2017



자료: OECD, Stat, ILO DB, 저자계산.

“실질임금증가율과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 간의 차이”는 “GDP디플레이터와 CPI 기준 물가상승률 간의 차이”로 대부분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2000-2017 기간동안 각 35개 OECD 국가에서 연평균 실질임금증가율과 취업자당 실질경제성장률 간의 차이와 GDP디플레이터 및 CPI 기준 물가상승률 간의 차이에 대한 산포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임금증가율과 취업자당 실질경제성장률 간 괴리”는 “두 물가지수의 물가상승률 간 괴리”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하며 두 괴리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0.867)가 존재한다.

#### (4)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의 원인

한국경제에서 평균 실질임금증가율은 2000년 이후 낮은 편이고 2010년 이후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그 원인이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 때문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를 보면 2000년-2010년 기간 실질임금(A)은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그 후 2010-2017년 기간에는 증가율이 연평균 1.3%로 둔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0년-2010년 기간 실질GDP(D)는 연평균 4.4% 증가했으며 2010-2017년 기간 증가율은 연평균 3.0%으로 다소 둔화되었다. 두 기간 모두 실질경제성장률(D)은 실질임금증가율(A)을 각각 크게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업자당 실질GDP증가율(C)은 두 기간에 각각 3.1%와 1.4%에 불과하고 GDP를 임금과 비교하기 위해 소득개념으로 간주하여 CPI로 실질화한 실질GDP증가율(B)은 두 기간 각각 2.5%와 1.2%로 낮아지며 같은 기간 실질임금 증가율(A)과 매우 유사하다.

〈표 4〉 실질임금 및 실질GDP 증가율 비교(연평균 증가율)

	실질임금(취업자 일인당)	실질GDP(취업자 일인당, CPI)	실질GDP(취업자 일인당, GDP디플레이터)	실질GDP (GDP디플레이터)
	A	B	C	D
2000-2010	2.2%	2.5%	3.1%	4.4%
2010-2017	1.3%	1.2%	1.4%	3.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저자계산.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상승률이 낮고 점차 낮아지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국민소득에 비해 임금이 적게 배분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자당 GDP증가



율이 낮고 낮아지고 있는 데 있다. 여기서 취업자당 GDP증가율은 넓은 의미에서 노동생산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가 진짜 원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금 없는 성장’이 아니라 ‘저성장으로 인한 낮은 임금증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본다. 그동안 GDP증가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원인은 취업자 수 증가에 있고 이러한 취업자 증가요인을 통제하고 나면 취업자당 GDP증가율은 매우 낮아지고 임금증가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임금과 노동생산성 간의 유의미한 괴리가 존재하지 않고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임금이 낮은 이유는 노동생산성이 낮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OECD Stat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국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OECD 36개국 중 22위에 불과하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9위에 불과하다.<sup>17)</sup>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개선되고 순위가 상승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3. 노동생산성과 임금: 기업체 자료 분석

본 절에서는 기업체 원시자료를 기초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변화추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우리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변화추이를 비교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의 한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조사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이고 대표성이 높으며 기업단위 부가가치와 임금 변수가 함께 제공되는 자료로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들 수 있다. 이 중 기업활동조사는 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며 자본금 3억 원 이상인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자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은 영리법인에 대해 2008년 이전에는 표본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수조사에 기초하여 기업에 대한 재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sup>18)</sup> 개별 기업자료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은행 ECOS는 원시자료에 기초하여 산업별 재무제표와 부가가치 구성 등 다양한 변수들과 가공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경영분석은 국민계정 작성에 참고자료로도 이용되고 있고 법인기업의 재무적

17) 2010년 PPP 미국달러 고정가격 기준이다.

18)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2008년까지는 표본조사에 의존하였고 2009년 이후는 전수조사 자료다.

상태에 관한 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별 종사자 수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종사자당 노동생산성과 임금을 직접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금을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것이 바로 부가가치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므로 인건비 비중의 변화를 통하여 두 변수 증가율의 상대적 변화를 가늠하고자 한다.<sup>19)</sup> 또한 인건비는 임금총액과는 달리 급여,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까지 포함하는 등 노동에 대한 댓가로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비교하는데 더 부합하는 지표라고 판단된다.

기업경영분석에서는 부가가치와 그 구성항목으로서 인건비, 영업잉여, 금융비용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인건비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인건비 비중이 커지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에 비해 명목임금이 더 크게 증가한 것이고 반대로 그 비중이 작아지면 명목임금이 더 적게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부가가치액은 재무제표 상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 및 관리비를 제하고 인건비와 대손상각비를 다시 더한 금액이다. 추정된 부가가치는 다시 영업잉여,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 및 공과, 감가상각비로 분류된다. 여기서 영업잉여의 개념은 영업손익에 대손상각비를 더하고 금융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된다.<sup>20)</sup> 한국은행 ECOS가 제공하고 있는 산업별 부가가치의 구성 자료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2002년 이후 기간은 부가가치 구성항목으로 '영업잉여'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2001년 이전 기간에는 '영업잉여'가 아니라 '경상이익'이 구성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시계열적으로 일관된 구성요소의 비중을 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ECOS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의 기초변수들을 토대로 2000년 이후 기간 '영업잉여' 항목을 비롯한 나머지 부가가치 구성요소들을 직접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2002년 이후 기간에 있어서는 실제치와 추정치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 산업 법인 부가가치의 구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ECOS에는 2002년 이후에 한해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세부산업별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나 기간에 따라서 제공되는 세부산업의 범위가 다르므로 단순히 합산하여 구성비를 구하면 시계열적 일관성이 결여된다. 그러므로 200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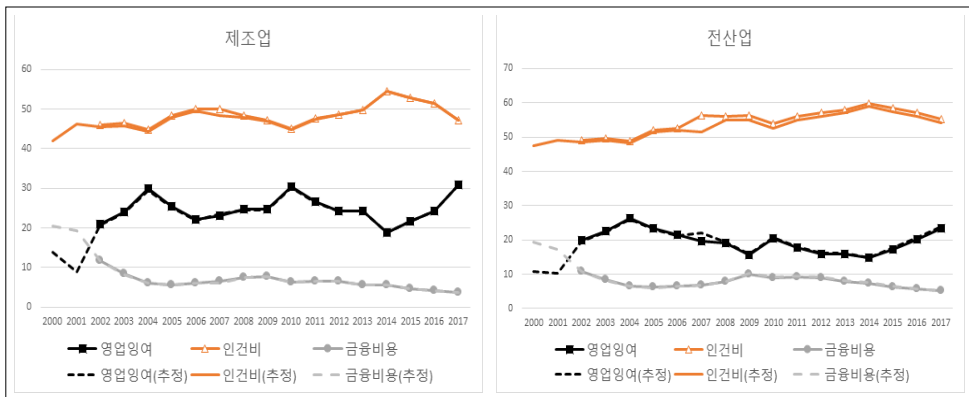
19) 기업경영분석에서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항목과 제조원가명세서 중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20) 기업경영분석의 영업잉여는 국민계정의 법인의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되게 제공되는 산업들만을 선택하고 이들의 재무 기초변수들을 합산하여 전산업 시계열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부가가치 구성요소들의 비중을 계산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합산하여 추정한 전산업의 부가가치는 실제 전산업 부가가치의 약 96.5%에 달한다.<sup>21)</sup>

〈그림 6〉은 제조업과 전산업에 대해서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에 대한 추정치와 실제치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2002년 이후 기간을 보면 실제치와 추정치가 추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과 전산업 모두 2000-2017년 기간 동안 법인기업의 인건비 비중은 등락을 하며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은 2000년 42.1%에서 상승하여 2017년 47.2%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전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2000년 47.6%에서 2017년 54.3%로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다. 부록 〈그림 A1〉에 제시된 제조업 이외 나머지 대분류 주요산업의 구성요소별 비중추이를 살펴봐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명목노동생산성에 비해서 명목임금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림 6〉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 제조업과 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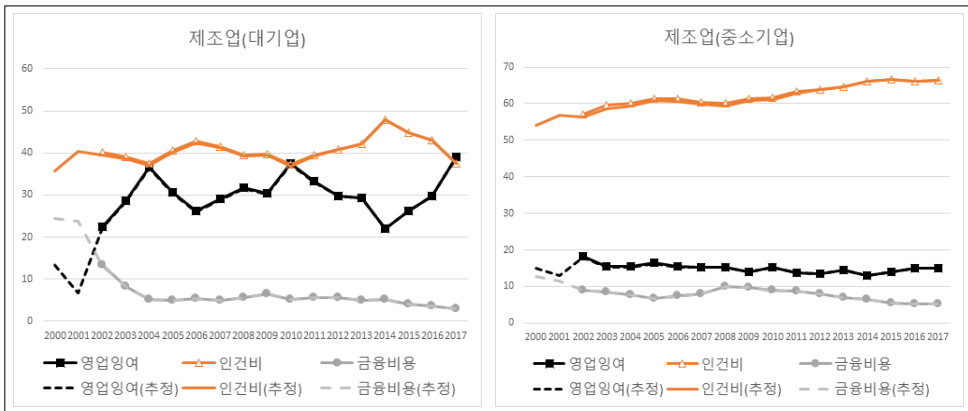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기초로 저자계산.

- 주: 1) 편의상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조세 및 공과, 감가상각비의 비중은 표시하지 않았음.  
2) 추정치는 시계열 일관성을 위해 재무제표 기초변수들을 토대로 계산한 비중이며 2002년 이후 실제치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21) 산업 중 시계열상 일관성을 위해 농업(A1), 교육서비스업(P)은 제외하였다. 포함된 산업은 어업(A2),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건설업(F), 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업(I), 통신업(J),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서비스업(N),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이다.

〈그림 7〉은 제조업 내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등락을 하고 있으나 유지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앞서 확인한 전체 기업의 인건비 상승추이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비중 상승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7〉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 제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기초로 저자계산.

주: 편의상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조세 및 공과, 감가상각비의 비중은 표시하지 않았음.

#### 4. 노동생산성과 임금: 사업체 자료 분석

본 절에서는 제조업 사업체 원시자료를 기초로 노동생산성과 임금의 변화추이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원시자료는 광업 및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에 관한 전수자료로서 부가가치 및 임금에 변수들을 제공하는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통계자료다. 자료에는 종사자수, 출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연간급여액 등의 생산 및 비용에 관한 연간 변수들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본 자료는 사업체(공장) 단위자료이므로 기업체단위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 기업이 제조업 사업체 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사업체를 추가로 보유한다면 사업체 단위 자료를 기업체단위로 합산하여도 기업체단위 자료의 일부에 해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한 기업이 두 개의 사업체를 기초로 두 개의 다른 제조 세부 산업 품목을 생산한다면 산업단위 합산에서 해당 기업의 성과는 두 개의 다른 산업에 포함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기업체단위 자료와는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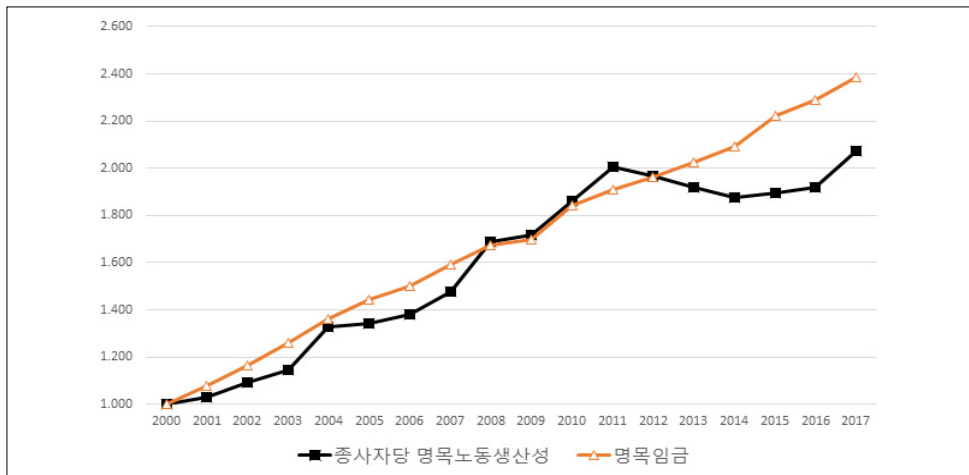
우선 전체 제조업의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식 (3) 과 같이 제조업 부가가치액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구했고 종사자당 명목임금은 식 (4) 와 같이 연간급여액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두 변수를 명목으로 비교하는 이유는 노동의 부가가치 기여분과 노동에 대한 보상분을 같은 금액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함이다. 또한 앞서 III장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두 변수를 두 개의 다른 물가지수로 실질화하는 경우에 물가지수의 차이로 인해서 비교에 심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text{명목노동생산성} = \text{부가가치액} / \text{종사자수} \quad (3)$$

$$\text{명목임금} = \text{연간급여액} / \text{종사자수} \quad (4)$$

〈그림 8〉은 제조업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을 2000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하고 각 지수에 대해서 2017년까지 누적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에 따르면 2000-2017년 기간 동안 제조업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107.1% (연 4.4%) 증가한 반면 동기간 명목임금은 138.5% (연 5.2%) 증가하였다. 임금은 2012년까지 노동생산성증가에 준하여 증가하였고 그 이후 제조업의 부진에 따라서 노동생산성 증가는 정체된 반면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동생산성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제조업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의 추이(2000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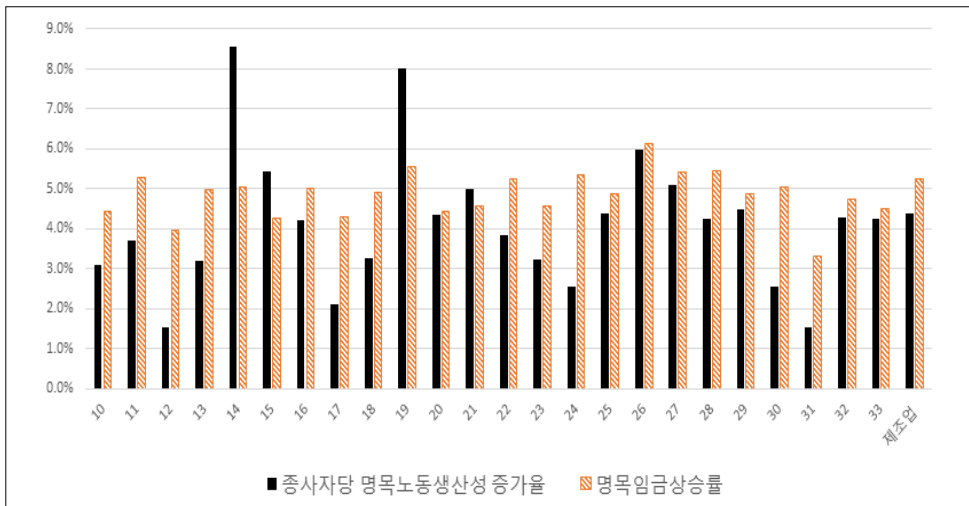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명목 부가가치액을 종사자로 나눈 수치고 명목임금은 연간급여를 종사자수로 나눈 것임.

〈그림 9〉는 제조업 세부 24개 중분류 산업에 대해서 2000-2017 기간의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각 산업별 통계치는 부록 〈표 A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0-2017년 기간 동안 24개 중분류 제조업 중 4개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분류 제조업 산업에서 명목임금증가율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명목임금상승률이 종사자당 명목부가가치증가율을 초과한 20개 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제조업 고용의 94.9% 그리고 부가가치의 9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9〉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상승률: 중분류 제조업, 명목 연평균 증가율, 2000-2017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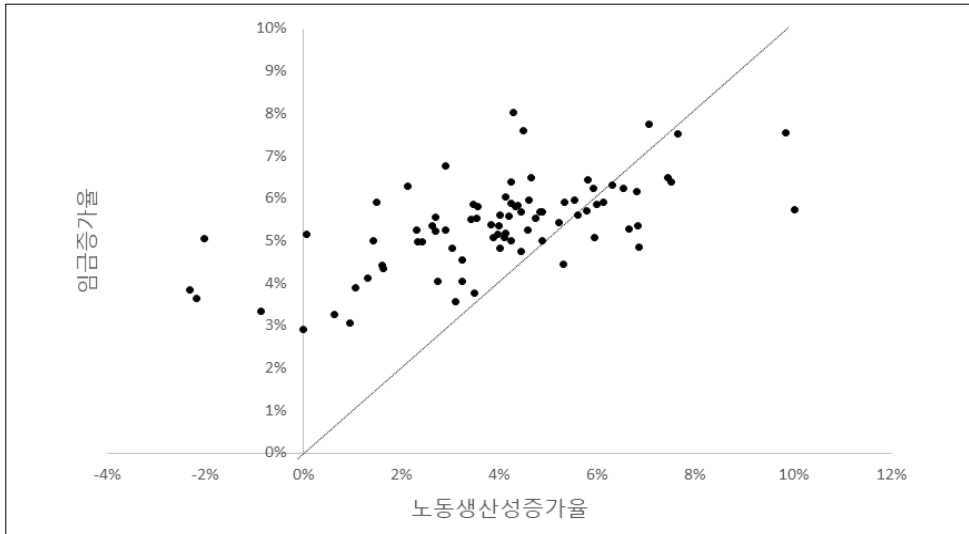
주: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명목 부가가치액을 종사자수로 나눈 수치고 명목임금은 연간급여를 종사자수로 나눈 것임.

〈그림 10〉은 제조업 세부 83개 소분류 산업에 대하여 2000-2017 기간 명목노동생산성과 명목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00-2017년 기간 동안 83개 소분류 제조업 산업 중 66개 산업에서 명목임금증가율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66개 산업은 2017년 기준으로 제조업 고용의 82.3% 그리고 부가가치의 81.0%를 차지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22)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임금증가율이 더 낮은 4개 산업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등이다.

제조업 세부산업에서는 2000년 이후 명목임금증가율이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상승률: 소분류 제조업, 명목 연평균 증가율, 2000-2017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명목 부가가치액을 종사자로 나눈 수치고 명목임금은 연간급여를 종사자수로 나눈 것임.

본 절에서 관찰한 바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장기적으로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충격에 따라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0-2012년 기간을 보면 평균 증가율은 두 변수가 거의 같았으나 2012년 이후 수출주력산업의 부진으로 부가가치 증가율이 정체된 반면 고용된 노동은 적게 감소하여 두 변수 간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5. 노동소득비중과 가계소득비중에 대한 함의

### (1) 노동소득비중 비중에 대한 함의와 측정상의 문제점

본 연구는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낮았다는 주장은 통계자료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로는 2000년 이후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증가

율보다 유사하거나 높았다는 실증적 근거를 미시 및 거시자료를 기초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기존 국내외 문헌들이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증가율보다 낮아서 전체 경제의 부가가치 중 노동소득 비중이 감소했다는 주장은 추론에 대한 가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노동소득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주장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만한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기존 문헌들이 제시한 자영업 부문을 감안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측정상의 이슈들이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대안적 측정방법도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왜곡이 분명히 존재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를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있어서 자영업부문의 소득에 대한 조정이 불완전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방법들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임의의 가정으로 노동과 자본으로 구분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의 잉여를 제외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비현실적인 수치가 도출되는 관계로 몇몇 문헌에서는 후자의 방법론을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sup>23)</sup> 하지만 이렇게 도출된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산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자영업부문 고용원의 피용자보수가 여전히 잔여 부가가치에 남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자영업의 영업잉여를 제외하면 잔여 부가가치는 법인부문 부가가치, 자영업부문 부가가치의 일부인 고용원의 피용자보수, 그리고 정부부문 피용자보수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조정과정에서 자영업 부문을 제외하고자 한다면 자영업부문 고용원의 피용자보수도 함께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부문의 피용자 보수에 대한 고려를 간과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부문 특성상 1에 가까울 수 밖에 없으며 2017년 전체 피용자 보수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상당히 크다. 시장의 기능적분배율이 관심이라면 정부부문의 크기에 따라 전체 분배율이 기계적으로 달라질 것이므로 조정과정에서 이를 제외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적은 소규모 법인들은 규모와 경제적 행위에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민계정 회계상 자영업자 영업잉여는 가계부문 잉여에 그리고 법인 영업잉여는 법인부문 영업잉여에 각각 구분되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한다면 상당

23) 주상영·전수민(2014)과 이병희(2015)을 참고하였다.



한 왜곡이 있을 것이다. 특히 통계청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에 의하면 전체 5인 미만 소규모 법인의 수가 2010년 19.7만개에서 2017년 40.3만개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소규모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자영업이 소멸되고 신생 사업자가 법인형태를 선택하는 추세적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들어 국민계정의 요소비용국민소득 추계에서는 일부 대규모 자영업자들의 잉여를 법인 부문 잉여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 방식의 조정노동소득분배율 계산은 측정상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므로 기존 방식으로 그 추이를 단언하기 전에 왜곡교정에 필요한 세부자료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sup>24)</sup>

## (2) 가계소득비중 변화에 대한 함의

최근 정책당국과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소득 중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소득 즉, ‘가계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2000년대 들어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토대로 경제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기업보다 가계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우선 기업들의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가계소득 비중의 감소가 기업들이 임금을 생산성보다 적게 배분한데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계소득 비중 감소추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소득구성을 더 세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에는 개념 정의상 가계부문에 속하는 피용자보수 뿐만 아니라 자영업의 영업잉여가 포함된다. 요소비용 국민소득 기준으로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세부요소로 구분해서 각 세부요소들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2000~2017년 기간 동안 자영업부문 영업잉여(가계 영업잉여) 비중은 22.4%에서 1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임금으로 받는 피용자보수 비중은 오히려 57.8%에서 63.0%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그러므로 가계소득비중 감소의 일차적인 원인은 피용자보수의 변화가 아니

24)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측정상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박정수(2019)에 보다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25) 가계소득 개념은 국민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구성하는 세부요소의 변화를 파악

라 자영업부문의 감소와 이에 따른 자영업 영업잉여 비중의 감소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같은 기간 법인부문 영업잉여 및 재산소득은 8.0%에서 16.4%로 증가하여 자영업부문 영업잉여 비중의 감소와 법인기업 영업잉여 비중의 증가는 상쇄되고 있다. 이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자영업) 형태에서 법인사업자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자영업부문이 법인부문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앞 세부 절에서 소규모 법인기업들이 2010-2017년 사이에 두 배로 급증했다는 통계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결론적으로 피용자보수와 자영업 영업잉여 등 가계소득의 세부 구성요소들의 비중 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가계소득 비중감소의 원인을 단순히 기업들의 임금배분문제로 추론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또한 현대화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법인행태의 사업자가 증가하는 변화추세를 감안하지 않고 자영업자의 이익과 법인기업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추론하는 것 또한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계소득 비중 변화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세부 구성요소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관계를 국민계정자료와 기업체 및 사업체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기존 국내외 문헌들이 취업자당 실질GDP와 실질임금을 비교할 때 실질화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아 임금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해석상의 오류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존 문헌들의 주장과는 달리 명목기준으로 비교하거나 동일한 물가지수로 실질화하여 비교할 때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가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Bosworth et al. (1994)가 당시 미국의 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가 비교 해석상의 착시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둘째, 사업체 및 기업체 미시자료에서는 오히려 임금상승률이 더 높아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사업체 및 기업체 노동소득분배율이 2000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생산성에

---

하기 어렵다. 하지만 요소비용국민소득을 기준에서는 가계소득에 대응되는 세부구성요소들의 구성과 비중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절의 논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박정수(2019)에 제시되어 있다.

따른 임금배분문제가 노동소득 비중과 가계소득 비중 변화추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노동소득의 비중추정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 있으며 가계소득 비중감소에 대한 원인은 세부 구성요소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의 사실관계가 기존 일부 문헌들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거시 및 미시 실증자료를 기초로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았다는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잘못 인식된 사실에 근거하여 취해진 정책이 있다면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자본생산성보다 더 큰 부분을 가져가고 있어 여유가 있으므로 임금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면 이는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급격한 임금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분 이상을 노동에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부진한 기업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노동생산성 증가 둔화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 임금증가율 둔화의 원인은 노동생산성 증가의 둔화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생산성 개선을 저해하는 제도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중심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생산성 제고는 기존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혁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및 제도개혁을 통해 혁신과 투자촉진을 유도하여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기회들을 열어주고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높은 노동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큰 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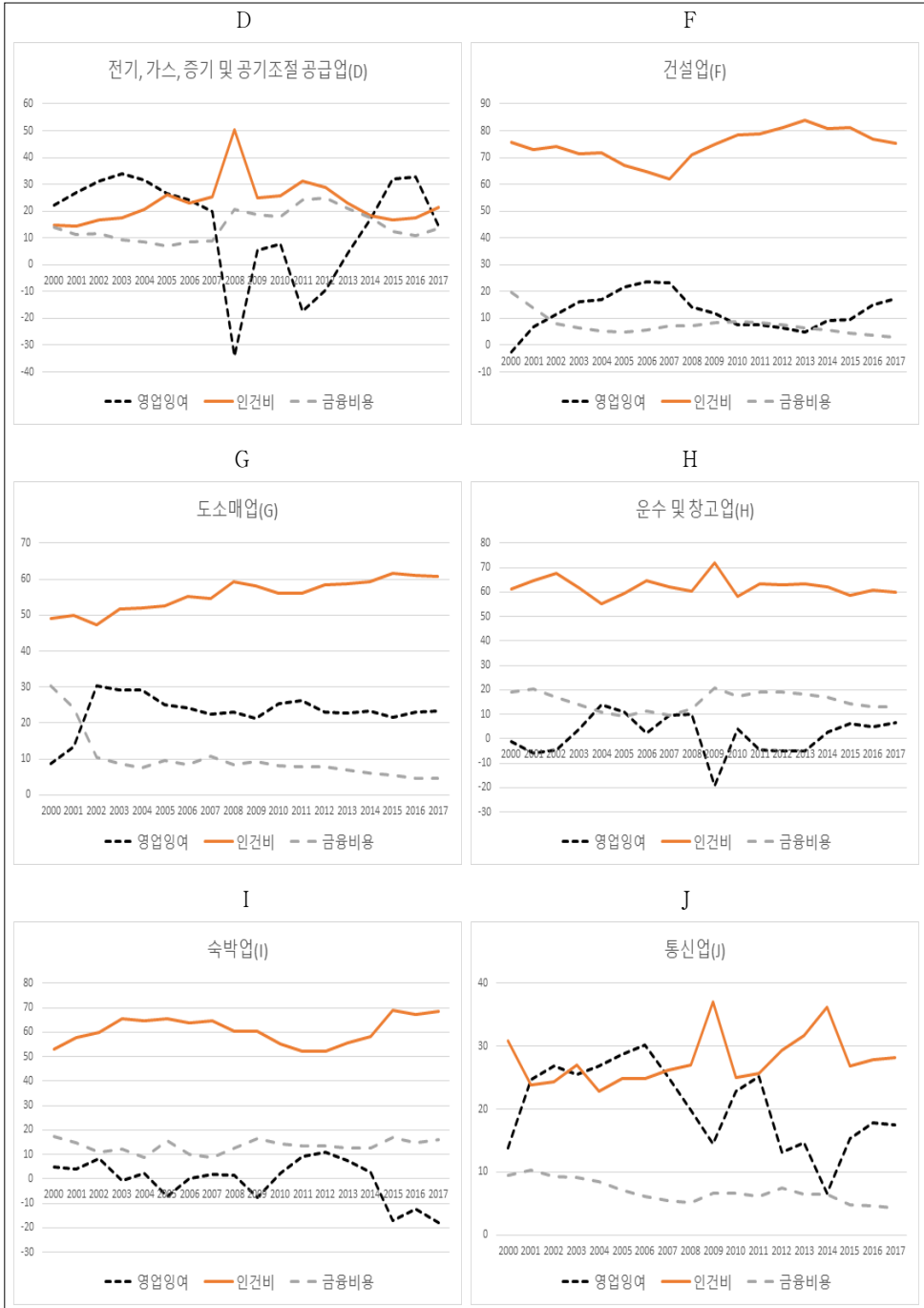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존 문헌들에 나타난 비교 해석상 오류는 물가지수 간 괴리를 간과한 데 있으므로 향후 비교 분석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한편 GDP디플레이터와 CPI 간 괴리에 대해서는 시계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기간별로 변동이 심한 편이다. 두 물가지수가 유가와 환율에 각각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에 따라서 두 물가지수의 상대적 상승률이 낮을 수도 또 높을 수도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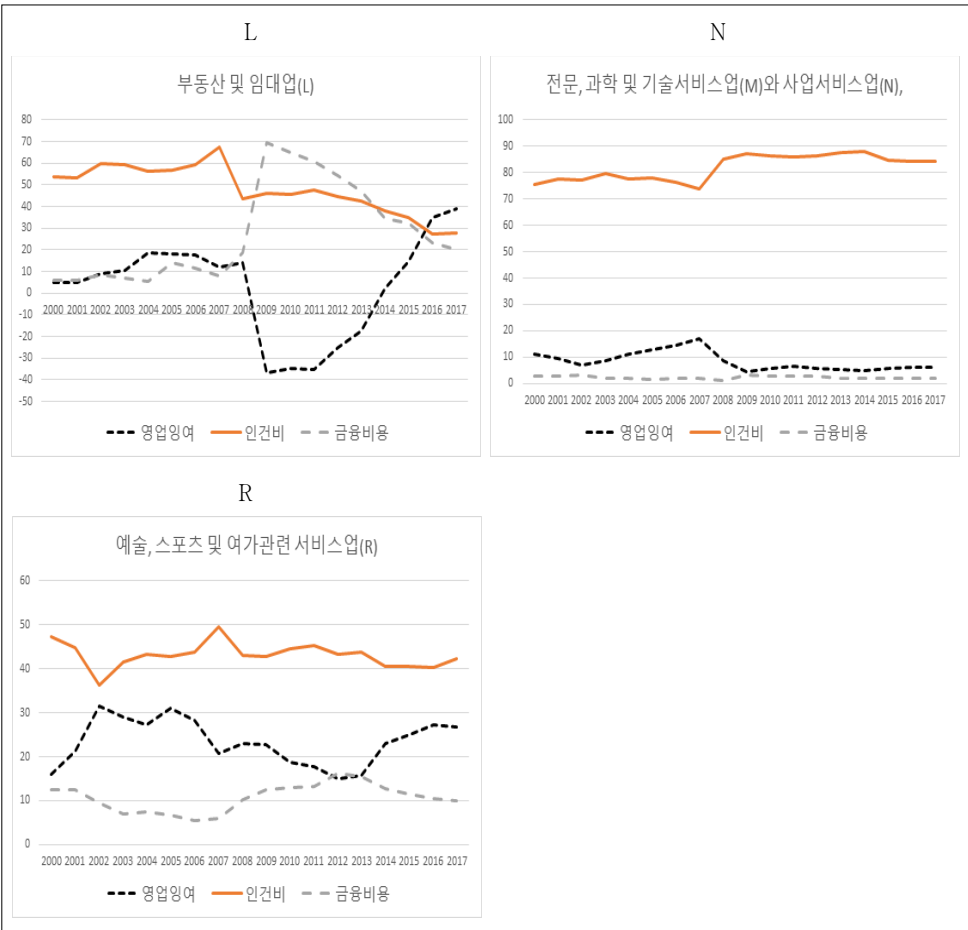
■ 참 고 문 헌

1. 김유선, 『한국의 노동 201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2. 남성일,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적정임금: 투자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1991. 9.
3. 박정수, “한국의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소득분배율, 그리고 가계소득” RIME Working Paper 2019-01, 서강대학교, 2019.
4. 박종규,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KIF 연구보고서 2013-08, 한국금융연구원, 2013.
5. ———, “임금없는 성장의 국제비교” 금융포커스 23-16, 한국금융연구원, 2014.
6. 이병희,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 pp. 25-42.
7. 장하성, 『왜 분노해야 하는가: 한국 자본주의 II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헤이복스, 2015.
8. 주상영 · 전수민,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 한국에 적합한 대안의 모색,” 『사회경제평론』, 43, 2014, pp. 31-65.
9. 한국생산성본부, 『기업규모별 업종별 노동생산성 분석』, 생산성연구소, 2013.
10.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클러스터”, 민주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발표, 2015
11. Bosworth, B., G. L. Perry, and M. D. Shapiro, “Productivity and Real Wages: Is There a Puzzl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4(1), 1994, pp. 317-344
12. Dabla-Norris, E., K. Kochhar, N. Suphaphiphat, F. Ricka, and E. Tsounta,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Staff Discussion Note SDN 15/13*, June 2015.
13. ILO, *Asia-Pacific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2018*, 2018.
14. Park, K. S., “Industrial Relations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Pacific Economic Review*, Vol. 12, No. 5, 2007, pp. 711-723.

# 〈부 록〉

〈그림 A1〉 기업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별 비중: 대분류 세부산업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기초로 저자계산.

주: 1) 편의상 부가가치 구성요소 중 조세 및 공과, 감가상각비의 비중은 표시하지 않았음.

2) 재무제표 기초변수들을 토대로 저자계산.

〈표 A1〉 종사자당 노동생산성증가율과 임금상승률: 중분류, 명목 연평균 증가율, 2000-2017

산업 코드	산업명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	명목임금상승률
10	식료품제조업	3.1%	4.4%
11	음료제조업	3.7%	5.3%
12	담배제조업	1.6%	4.0%
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3.2%	5.0%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8.5%	5.0%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5.4%	4.3%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4.2%	5.0%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2.1%	4.3%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3.3%	4.9%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8.0%	5.6%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4.4%	4.4%
21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5.0%	4.6%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8%	5.3%
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2%	4.6%
24	1차금속제조업	2.5%	5.4%
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및가구제외	4.4%	4.9%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6.0%	6.1%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5.1%	5.4%
28	전기장비제조업	4.2%	5.5%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4.5%	4.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6%	5.1%
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5%	3.3%
32	가구제조업	4.3%	4.8%
33	기타제품제조업	4.3%	4.5%
	제조업	4.4%	5.2%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저자계산.

주: 종사자당 명목노동생산성은 명목 부가가치액을 종사자로 나눈 수치고 명목임금은 연간급여를 종사자 수로 나눈 것임.

## Labor Productivity and Wage in Korean Economy

Jungsoo Park\*

###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comparison of labor productivity growth and wage growth in Korea for the 2000-2017 period. The findings show that contrary to the concern raised in the recent literature that wages are lagging behind growths in GDP per employment, actually wage growth and GDP per employment growth for the Korean economy were very similar for the corresponding period either in nominal terms or real terms using the same price index. Furthermore, the firm-level and establishment-level micro data show that wage growth is surpassing the productivity growth,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for the small-and-medium-sized enterprises. These findings imply that recent government policies to promote rapid wage increases based on incorrect facts should be reconsidered.

**Key Words:** labor productivity, wage, price index

**JEL Classification:** E24, E25

---

*Received: March 22, 2019. Revised: April 16, 2019. Accepted: April 26, 2019.*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 35, Baekbeom-ro, Mapo-gu, Seoul 04107, Korea, Phone: +82-2-705-8697, e-mail: jspark@sogang.ac.kr